

2014년 지방선거 민주당 노동분야 핵심 아젠다

우태현(한국노총 중앙연구원)

1. 2013년 한국노총 주요 현안 및 이슈

■ 노동계 주요 현안 및 이슈

- 노동기본권 확대 및 개선(노조법 재개정)
- 노동시간단축
- 최저임금
- 비정규직
- 고용안정

■ 노정관계 주요 정세

- ‘노동’없는, “성장의 도구에 불과한 ‘노동’”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인식
 - ※ 근로시간면제제도, 통상임금 문제 등 최근 드러난 몇가지 행태들
-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
 -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 규약시정 문제로 법외노조화 시도
 - ※ 근로해직자 조합원 자격

- 통상임금 해법을 비롯한 재계요구의 수용여부 등

※ 9.5 경제5단체 회장단 ‘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’에서 규제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

- ▲ 통상임금 관련법령 개정(근로기준법 개정안) :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경영난을 막고, 투자재원이 통상임금의 소급지급에 허비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 확립되어 있던 통상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반영 요구,
- ▲ 근로시간 단축(근로기준법 개정안) :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,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시간의 제도적 단축은 개별기업이 각자의 현실에 맞게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·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중장기적 추진
- ▲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 지양(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) : 정규직 과보호 환경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경우 원청기업의 부담증가,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아웃소싱, 국내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법에 신중
- ▲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(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) : 새 제도 입법이나 새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계의 요청과 국회소관상임위의 판단을 거쳐 법안심사를 위한 일자리영향평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

- 그 외

-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단시간 일자리 투입으로 인한 여성고용을 제고를 통해서 고용율 70% 통계달성을 위한 꿈수
-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‘단순무기계약직’으로 전환, ‘서류상’ 정규직화 꿈수
-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는 재계가 제기한 통상임금 등을 합의장제하기 위한 기구로 전략 우려

<주요 노동관계 입법-환노위 계류현황>

6대 노동입법	야당 발의법원	새누리당 발의 법안
노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김경협 의원 등 127인(당론발의) - 전임자 노사자율, 창구단일화 제도폐지,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, 공격적 직장폐지 제한 등 	없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심상정 의원 등 10인 - 전임자 노사자율, 창구단일화 제도폐지,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, 공격적 직장폐지 제한 등 	
근로기준법 (노동시간단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정애 의원 등 23인 - 법정노동시간 5인 미만 적용,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,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완영 의원 외 10인 -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, 연장근로한도 20시간(주60시간까지)확대,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
근로기준법 (정리해고 규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홍영표 의원 등 23인 - 정리해고 최후수단원칙 확립, ■ 심상정 의원 등 10인 -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경영상 긴박성 인정, 사전 해고협의 의무, 	없음
비정규직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근로기준법 개정안(은수미 의원 등 127인/당론발의) - 근로자공급사업, 파견고용 외 간접고용 금지 ■ 근로기준법 개정안(심상정 의원 등 10인/당론발의) - 상시적 업무에 직접고용,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, 모든 노동자에 차별시정신청권 부여 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(박지원 의원 등 126인/당론발의) -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신청권 노조확대, 차별시정권 확대 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(은수미 등 126인/당론발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(이한구의원 등 28인/당론발의) - 차별시정신청권 노조확대, 반복적 고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, 차별시정권 확대 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(은수미 의원 등 28인/당론발의) - 복리후생, 상여금 등 차별금지, 기간제법 개정에 따른 파견법 정비 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신설(이한구 의원 등 28인/당론발의) -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처우 개선, 정규직 전환 노력 등
최저임금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문재인 의원 등 127인(당론 발의) 	없음
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 개정 (정년보장 60세 의무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홍영표 의원 외 13인 ■ 이목희 의원 외 10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김성태 의원 외 10인 ■ 이완영 의원 외 13인 ■ 정우택 의원 외 11인

2. 2014년 민주당의 노동정책 방향

■ 지방 수준의 ‘노동’ 전략 - 정책적 차원과 정무적 차원

1) 정책차원

- 지역노사정위원회 활성화

- 정당의 지역조직, 지역 정치인(국회의원/단체장 및 지방의원)의 ‘노동의제’ 및 ‘노동조합’을 보는 시각의 문제. 즉, 선거동원의 대상 이외에 정책 파트너로서의 시각 부재

- 지역위원회(거버넌스)는 지자체 정책의 ‘동의’ 유인 기구일 뿐, 거버넌스로서의 위상 부재

※ 지방공무원들의 정책집행 행태

-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정책 거버넌스(입안과 집행, feed back)

- 민주당과 새누리당과의 차별성 확인과정 필수

※ 지역행정혁신, 거버넌스혁신, 정책혁신 등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비교 검토필요 - 얼마나 다른가? 그리고 비교우위가 있나?

- 지자체 수준에서 민주당의 총선·대선 공약 실현방안 검토(예시)

- 박원순 시장의 시청 비정규직 직접고용의 경제학

※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의 정치

- 노동조례 재개정 검토

※ 지방차원에서 노동정책의 재검토 사례 - 양노총 지역조직 참여 및 지역의 노동전문가 및 관련 기구 참여

- 지역 비정규직 센터
- 지역현안(고용, 환경, SOC) 거버넌스 조직

2) 정무적 차원

- 정책파트너(거버넌스 파트너)의 지지와 동원 /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확장